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설 문 원 (Moon-Won Seol)**

목 차

- | | |
|------------------------|-----------------|
| 1. 서론 | 3.1 기록분류 일반론 |
|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2 보존기록의 분류 |
| 1.2 기록학의 세부 분야로서 기록분류론 | 3.3 근대 역사기록의 분류 |
| 1.3 용어와 개념 | 3.4 현용기록의 분류 |
| 2. 동향 분석 | 4. 연구 과제 |
| 2.1 분석대상 논문 | 4.1 보존기록의 분류 |
| 2.2 분야별·연도별 통계 | 4.2 현용기록의 분류 |
| 3. 내용 분석 | 5. 맺음말 |

<초 록>

국내에서 기록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14년을 경과하면서 기록분류와 관련하여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공공기록물관리법과 연구논문에 등장하는 분류 관련 용어를 조사함으로써 분류론의 범주를 정리하였다.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기록분류와 관련된 35편의 논문을 선별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들의 내용과 특징, 한계를 밝힘으로써 기록분류 연구가 현장의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했으며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해외 연구 동향, 국내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록 분류, 보존기록 정리, 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 기능분류, 연구 동향, 연구 과제

<ABSTRACT>

The study aims at reviewing research trends of records classification and archival arrangement, analysing issues, and suggesting futures tasks in related research area. It starts with defining research categori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through analysing the term of 'classification' being foun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irty five research papers which are covering classification of records and archives and published in 1980's are selected for contents analysis. Considering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the practical needs, it makes clear the issues and tasks for future research. The study concludes with emphasizing more empirical research for guid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reformulating archival theories in electronic environments.

Keywords: records classification, archival arrangement, principle of provenance, principle of original order,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research trends, research issues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eol@pusan.ac.kr)

■ 접수일: 2012년 11월 22일 ■ 최초심사일: 2012년 1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록학의 여러 하위 분야 중 범주 설정이 가장 애매한 분야 중 하나가 '기록분류론'일 것이다. 기록의 분류는 기록관리 과정의 핵심적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영역으로서 기록분류론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와 내용에 대한 국내 기록관리계의 보편적 합의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용어와 개념 때문이다. 문헌정보학 분야인 자료조직론에서는 자료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거나 모으는 작업을 통상 '분류'라고 부르지만, 기록관리에서 이러한 작업에 해당하는 용어는 분류뿐 아니라 정리(arrangement), 파일플랜(fileplan), 편철, 파일링(filing), 집합(aggregation) 등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기록생애주기론에 근거한 방법론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야가 분류론이기 때문이다. 현용기록의 분류와 보존기록의 '정리' 연구는 단절되어 있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기 어렵다. 물론 서구의 기록학계에서조차 기록분류론이 명확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보존기록 분야의 경우 '정리와 기술(arrangement and description)'이 함께 따라 다니고 정리는 기술의 사전 작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용기록의 분야에서 분류 연구는 경영학 등에서 정립된 업무분석방법론에 입각한 업무분류체계 설계나 정보관리 관점의 문서 파일링 등을 주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기록관리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은 본질

적으로 분류의 영역이다. 기록학의 성립과정에서 등장한 이들 원칙들이 결국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분류하고)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는 점에서도 기록학에서 분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기록관리 환경에서 기록분류는 많은 연구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분류체계를 도입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관리 실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기록관리전문가협회 2012). 이러한 상황은 분류 실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넘어 기록분류에 대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현용기록의 분류체계와 보존기록의 정리체계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앞으로 전자기록의 이관이 전면화될 경우 큰 문제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록학계에서는 기록분류에 대한 연구사가 제대로 정리된 바가 없다. 분류의 제도사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 1월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설립되고, 2000년 7월에는 한국기록관리학회가, 2000년 12월에는 한국기록학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기록학 연구가 이루어진 지난 10여 년 간 기록분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 연구들의 세부 지형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체계적 기록분류 방법론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 학계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작년부터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록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에 기록

평가론과 전자기록에 관한 두 편의 논문(최재희 2011; 이소연 2011)이 발표되었고, 이 연구는 그 뒤를 잇는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기록분류론이 포함하는 범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록분류의 개념과 용어의 난맥상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류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는 대신 기본적 수치를 통한 전반적인 동향을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세부 분야별로 연구 내용을 집중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기록분류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간 발표된 학술 논문은 35편으로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야별 연구논문들의 내용과 특징, 한계를 밝힘으로써 전반적인 기록분류 연구의 현 단계를 조망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연구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고려하되 해외 연구의 동향과 국내 현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기록학의 세부 분야로서 기록분류론

기록학의 하위 분야로서 기록분류론이 포괄해야 하는 영역을 밝히기 전에 먼저 구분해야 할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의 다양한 활동에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분류'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를 조사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다양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분류는 기능이나 업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는 활동과 보존기간, 공개, 비밀, 접근권한 등의 관리 속성을 부여하는 활동에 두루 사용된다. 동법 1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분류의 기준이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접근권한의 정도가 되는 것이다. 즉, 기록관리의 다양한 분야에서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의 분류체계는 공개, 비밀, 접근권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비밀, 접근권한 등의 기준에 따라 기록을 구분하는 것은 분류론과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은 또 다른 연구분야에 속하는 주제들이다. 보존기간의 결정은 평가론에서, 공개, 접근권한, 비밀기록으로의 설정과 해제는 공개관리 및 서비스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주제가 될 것이다(<표 2> 참조). 한편 기록(혹은 기록집합체)에 부여하는 이러한 속성들의 관리는 메타데이터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분류라는 용어의 다양한 용법은 간혹 기록관리행정가들과 기록연구사나 연구자들과의 소통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한다.¹⁾ 이러한 양상은 분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떠한 속성을 표현할 때, 특히 미리 설정된 몇 개의 속성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선택할 때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관례와도 관련이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분류, 영화 등급 분류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기록학 도입 초기에는 "보존·활용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행위", 즉 기록의 평

1) 가령 많은 지자체가 기록연구사 채용을 위한 시험으로 시행하던 "기록물평가분류" 과목이 다뤄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다. 후에 과목명에 '(기술 포함)'이란 구절이 덧붙여지기도 하여 기록평가론과 기록조직론의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1〉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나타난 ‘분류’ 용어

용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u>분류</u>·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정의 제3항)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u>분류</u>·<u>편철</u>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록물의 등록·<u>분류</u>·<u>편철</u> 등) “정부기능분류체계”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법정분류체계에 표준화한 <u>기능분류체계</u>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 제5항)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u>처리과별·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시행령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기능분류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u>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u>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u>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제2항)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u>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u>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1항)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u> 등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기록물 중 제1항에 따른 이관시기 경과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u>공개 재분류</u> 등 이관 사유가 발생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제2항) 공공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시행령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공공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u>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시행령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제1항) 	관리속성에 근거한 기록 분류

〈표 2〉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나타난 ‘분류’의 용례와 연구 분야

용어	분류 행위의 내용	주요 연구 분야
기록물 분류	기능분류체계에서 해당 기록물의 위치 결정	분류
처리과별·단위과제별 기록물 분류	처리과 코드와 단위과제코드를 기록에 부여하는 활동	분류
정부 기능 분류	정부기능과 업무를 체계적, 계층적으로 분해	분류
보존기간 분류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업무나 기록(집합체)에 부여	평가
보존가치 분류	"	평가
공개 여부 분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관리 및 서비스
비밀 여부 분류	비밀, 일반	공개관리 및 서비스
접근권한 분류	기록별, 직책(사람)별 접근통제 요건 설정	공개관리 및 서비스

가(appraisal)를 의미하는 용어로 '평가분류'를 사용하였다(김익한 1998). 이러한 용례는 이송순(2006)의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라는 논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분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보존기간 책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가의 결과로 보존기간에 따라 기록물을 구분하는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에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보존연한에 따라 문서를 구분하였고(갑, 을, 병, 정, 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러한 방식을 답습하여 보존연한에 따른 구분(특류, 갑류, 을류, 병류)을 분류라고 칭하는 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구분은 편철이나 서가배치 등 기록의 물리적 질서를 정하는 기준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보존기간 혹은 보존가치의 분류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와 같은 속성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기록(혹은 기록집합체)에 부여하는 행위이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개 분류'도 해당 기록물에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중 하나의 속성값을 부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는 기록분류론 자체보다는 평가와 공개와의 관련성이 높은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을 분류하는 목적은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증거가치를 높이고, 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며, 기록의 계층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설문원 201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록의 분류체계 및 분류활동이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방법론, 원칙 등에 관한 연구가 분류의 핵심적 연구영역이 될 것

이다. 또한 현용기록의 분류에서 보존기록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록을 모으고 구분하여 논리적 질서를 구축하는 모든 행위, 즉 편철, 파일링, 집합, 계층화, 분류 등이 모두 분류론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

1.3 용어와 개념

분류론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혼란을 주는 용어는 정리(arrangement)이다. 최근에는 용어뿐만 아니라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한 도전도 이루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보존기록의 정리에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최정태, 이주현 2002; 설문원 2003)도 있고, 현용기록의 분류와 보존기록의 정리를 구분하지 않고 분류로 통칭한 경우(이원영 2000; 이아현 2002)도 있다. 김정하(2009)는 출처와 원질서 원칙에 의한 '정리'에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훼손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분류와 정리의 개념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분류는 종합하는 방법으로서 "하위개념에서 상위개념으로 상승하는 현상"인 반면 구분은 분석적인 방법으로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하강하는 형식"이라고 이주연, 최정태(2003)는 규정한 바 있다. 철학사전에서도 집합체를 작은 집합단위로 나누는 작업은 구분이며, 개별 개체나 작은 집합단위를 큰 집합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은 분류라고 말한다(임석진 외 편저 2009). 도서관에서 문헌을 분류하는 것은 동일한 주제의 문헌을 모은다는 점에서 '분류'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존기록의 정리는 '구분'의 개념과 유사하다. 정리는 이관 받은 기록물 중에서 출처에 따라 기록물군을 구분하고, 원질서

를 존중하면서 기록물군을 작은 단위로 나뉘는 하향식 작업이기 때문이다(설문원 2011).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출처와 원질서의 원칙을 준수한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애매한 경우도 많다. 특히 전자환경에서도 하향식 정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령,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건과 철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기록과 함께 이관 받는다. 이 경우 다계층 기술의 원칙에 따라 상위 계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기술하는 대신 이미 기술된 하위 계층(철과 건)과 생산맥락 정보(예를 들어 전자레코드나 기능레코드)와 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한편 정리는 기록집합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귀납적 작업이기 때문에 분류체계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자적이고 연속체적 관리가 정착된 후에도 보존기록의 모든 정리체계가 이관 이후 사후적으로만 만들어져야 하는지 역시 다시 생각해 볼 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존기록의 정리가 분류와 어떻게 다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생산 당시의 맥락을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기록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보존 기록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물리적 배열을 중시하는 정리(arrangement)란 용어를 전자 환경에서도 고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대 기록관리환경에서는 '정리'라는 애매한 번역어 대신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기록의 물리적 질서 편성이 중요한 아날로그 환경에서 '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을 소개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밖에는 보존기록의 경우라도 '정리' 대신 '분류'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 동향 분석

2.1 분석대상 논문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우선 기록물(기록) 분류, 문서 분류, 기록(기록물) 정리, 아카이브 정리, 편철, 출처주의, 원질서라는 검색어로 국내 학술검색 서비스인 DBPIA를 검색하였고, 이중 학술지 논문만을 추렸다. '기록 정리'라는 검색어와 관련된 논문의 경우 일반적인 정리를 다룬 논문은 배제하였고 논리적 질서 편성으로서 정리(arrangement)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등을 다룬 논문 중에서도 분류업무를 비중 있게 다룬 논문만을 뽑았으며, 조선시대 이전의 고문서 분류는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35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내역은 <표 3>과 같다.

분야는 기록관리의 원칙과 일반론, 보존기록의 분류, 근대역사기록의 분류, 현용기록의 분류로 구분하였고 보존기록과 현용기록 분류의 경우 공공과 민간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여기서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을 기준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 된 기록이 주로 공공기록이나 민간기록이냐에 따라 나눈 것이다.

〈표 3〉 분야별 논문 현황

분야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	no		
일반	구자영(1981)	정부간행물 정리에 있어서의 보존문서 분류법 적용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1		
	이원영(2000)	기록물분류의 원리: 문헌분류와의 비교	기록학연	2		
	방효순(2002a)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	3		
보존 기록 정리	공공	윤주범(2004)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록관리	4	
		곽건홍(2010)	노동청 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	5	
	민간	이아현(2002)	조계종 총무원 보존기록물 정리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기록학연	6	
		전명혁(2003)	매뉴스크립(Manuscripts)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	7	
		설문원(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	8	
	외국	이승휘(2001)	중국의 혁명역사기록물의 목록기술과 검색분류(1)	기록학연	9	
		이승휘(2002)	중국의 혁명역사기록물의 목록기술과 검색분류(2)	기록학연	10	
		김유리(2003a)	중국의 기록물 정리분류의 원칙과 사례 분석	도서관정	11	
		김유리(2003b)	중국의 기록물 검색분류: 『중국당안분류법』(1997)을 중심으로	문헌정보	12	
		방일권(2003)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RGI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	13	
	채미하(2004)	근대 일본 역사기록물 분류론의 동향과 실제	기록학연	14		
	근대 기록 분류	조선총독부	박성진(2002)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방식	기록학연	15
			설문원(2003)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	16
			배성준(2004)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	기록학연	17
이승일(2006)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서지학연	18	
심세현(2012)			모덕사 소장 일제강점기 공문서의 기록학적 가치와 정리·기술 방안	충청문화	19	
대한제국기		박성준(2008b)	경리원의 역둔토 문서 분류와 분류 체계의 변형	규장각	20	
		박성준(2008a)	대한제국기 公文書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	21	
		박성준(2009)	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 분류도장·창고번호도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	22	
		박성준(2011)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공문서 편철과 분류	기록학연	23	
현용 기록 분류	공공	방효순(2002b)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능적 단위로서의 단위업무 역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	24	
		조영삼(2002)	'구기록물' 재편철 방안의 모색	기록학연	25	
		최정태, 이주연(2003)	문서분류의 이론과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조이후 현행 '정부공문서 분류'까지	기록관리	26	
		설문원(2005)	전자기록철의 구조와 관리방안: 영국 ERMS 표준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27	
		김정남(2006)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 분석	기록관리	28	
		최관식(2006)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	29	
		장지숙, 이해영(2009)	맥락정보를 이용한 기록 자동분류시스템 설계	기록관리	30	
	이현정(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기록관리	31		
	민간	마원준(2004)	한국 개(個)교회기록물의 기능분류 방안	기록학연	32	
		유재옥(2005)	문서기록물의 파일링시스템에 관한 연구	비블리아	33	
		이영숙(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34	
박용부, 김태수(2011)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	35		

* 기록학연(기록학연구), 기록관리(한국기록관리학회지), 도서관정(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도서관학(한국도서관학회지), 문헌정보(한국문헌정보학회지), 비블리아(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한국정보관리학회지), 서지학연(서지학연구), 충청문화(충청문화연구), 이하 동일.

** 한국도서관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전신임.

2.2 분야별 · 연도별 통계

전체 논문을 분야별, 연도별로 다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002년-2003년에는 보존기록의 분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 이후에는 현용기록 분류에 관한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각급 공공기관에서 단위업무를 포함한 분류 체계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현용기록관리와 관련된 국제적 표준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논문들이다.

또한 보존기록의 분류와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에 관한 논문의 상당 수(총 6편)는 한국국

가기록연구원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었으며(설문원 2003; 김유리 2003a; 김유리 2003b; 배성준 2004; 채미하 2004; 이승일 2006), 대한제국기 기록분류에 관한 연구는 단일 저자(박성준)가 수행한 것이다.

분야별 논문 통계는 <표 5>와 같고, 학술지별 통계는 <표 6>과 같다. 학술지별로는 기록학연구에 13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10편이 실렸고, 문헌정보학 계열의 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연구, 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6편, 서지학연구에 3편, 역사학 계열의 학회지(역사연구, 규장각, 충청문화연구)에 3편이 실렸다.

<표 4> 분야별 · 연도별 논문 현황

연도	분야	일반론	보존기록의 정리			근대 기록의 분류		현용기록의 분류		계
			공공	민간	외국	조선총독부	대한제국기	공공	민간	
1981		구자영								1
2000		이원영								1
2001					이승휘					1
2002		방효순		이아현	이승휘	박성진		방효순 조영삼		6
2003				전명혁	김유리a 김유리b 방일권	설문원		최정태 · 이주연		6
2004				윤주범		채미하	배성준		마원준	4
2005								설문원	이영숙 유재욱	3
2006							이승일	김정남 최관식		3
2007										-
2008								박성준a 박성준b		2
2009								박성준	장지숙 · 이해영	2
2010								박성준	이현정	3
2011									박용부 · 김태수	2
2012							심세현			1
계		3	2	3	6	5	4	8	4	35

방법론적으로는 사례 연구의 비중이 커서 특정 기록물이나 특정기관에서의 분류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각 기관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방법론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각 연구에서 자신들의 분류방법론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대상기관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근대기록과 관련한 분류연구에서는 주로 사료 분석에 기반한 역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록분류와 관련된 이론적 함의를 담은 연구는 아직 적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고민이 담긴 연구들이 많아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각 연구가 제기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분야별로 열거하면, 케이스파일의 분류(이현정 2010; 이영숙 2005; 최관식 2006), 보존기록의 재분류(이아현 2002; 설문원 2003; 배성준 2004; 이승일 2006; 광건홍 2010), 기능분류체계 개발(마원준 2004; 최관식 2006), 분야별 공통분류체계의 개발(김정남 2006; 박용부, 김태수 2011), 다출처 수집기록물의 분류(전명혁 2003) 등이다. 각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표 5> 분야별 논문 통계

분야(계)	세부분야	편수
일반론(3)	-	3
보존기록의 정리(11)	공공	2
	민간	3
	외국	6
근대기록의 분류(9)	조선총독부	5
	대한제국기	4
현용기록의 분류(12)	공공	8
	민간	4
계(35)		35

<표 6> 학술지별 논문 통계

분야(계)	학술지	편수
기록학(23)	기록학연	13
	기록관리	10
문헌정보학(9)	서지학연	3
	문헌정보	2
	정보관리	2
	비블리아	1
	도서관정	1
역사학(3)	충청문화	1
	역사연구	1
	규장각	1
계		35

<표 7> 적용 기관별 연구 현황

대상 기관	저자(출판연도)
검찰청	이현정(2010)
공공기관(전체)	방효순(2002)
	조영삼(2002)
국가기록원	윤주범(2004)
	광건홍(2010)
국가기록원 등 (조선총독부 공문서 소장기관)	박성진(2002)
	설문원(2003)
	배성준(2004)
	이승일(2006)
국공립대학, 국가기록원	김정남(2006)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최관식(2006)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사료관	전명혁(2003)
모덕사(소장 총독부 공문서)	심세현(201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한제국기 문서 소장기관)	박성준(2008a)
	박성준(2008b)
	박성준(2009)
	박성준(2011)
교회	마원준(2004)
조계종 총무원	이아현(2002)
환경연합	이영숙(2005)
건설사(일반)	박용부·김태수(2011)

3. 내용 분석

여기서는 기록분류 일반론, 보존기록의 분류, 근대 역사기록의 분류, 현용기록의 분류라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국내 학계의 연구 흐름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는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용분석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 중에서도 일부 의미 있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3.1 기록분류 일반론

우리나라에 보존기록 분류의 원칙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구자영(1981)의 연구에서다. 구자영은 “정부간행물 정리에 있어서의 보존문서 분류법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보존문서 분류, 즉 보존기록 정리의 원칙인 출처주의를 소개하고, 정부간행물도 성격상 보존문서이므로 출처의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록학이 독립적인 연구와 교육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분류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원영(2000)의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정립된 기록분류의 원칙을 문헌정보의 분류와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현용기록의 분류와 보존기록의 정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분류’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문헌과 기록의 특성, 관리기관의 특성, 분류원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양자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쉘렌버그의 현대기록학 원리에 입각하여 기록분류의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기록조직론에 대한 당시 국내 연구자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준 계몽적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기록분류의 원칙으로서 출처 및 원질서 원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출처주의는 기록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보존기록의 분류업무를 관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효순(2002a)은 유럽과 미국에서 출처주의가 정립되고 적용되어 온 과정을 정리하고, 현대 기록관리 환경에서 새로운 출처주의의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호주 등에서 기록의 정리 및 기술업무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정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한 국내 기록관리계의 과제를 기록 조직의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다. 노명환(2006)은 독일에서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이 정립되는 과정을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의 연계 속에서 분석하였으나 기록조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3.2 보존기록의 분류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통일하여 사용)이 제정되었지만 과학적 기록관리방법론에 대한 국내의 이해 정도는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외국의 사례는 모두 역사기록의 분류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여기에는 이승휘(2001/2002), 김유리(2003), 방일권(2003), 채미하(2004)의 연구가 있다.

선진사례로서 중국의 기록물 분류체도를 상세히 소개한 이승휘(2001/2002)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검색분류라는 독특한 분류방식을 ‘혁명역사기록물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

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리분류(실체분류)와 검색분류라는 두 가지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분류는 기록물군(전종) 내의 기록에 대한 분류로서 원질서를 존중한 분류이다. 말하자면 '보존기록의 정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검색분류는 『중국당안분류법』 등과 같은, 미리 만들어진 분류표에 근거하여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리분류는 기록보존소나 자료관 범위 내에서 귀납적으로 형성되며 주로 전종구분과 전종 내의 기록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검색분류는 소장기관의 벽을 넘는 기능(직능분공) 분류 체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국의 검색분류표는 1983년부터 추진된 기록관리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되었으며, 청대 기록검색분류표, 민국시기 기록검색분류표에 이어 1995년에는 신민주주의 기록(혁명역사기록) 검색분류표가 확정되었다.

이어서 김유리는 중국 사례를 더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유리(2003a)는 서구의 출처주의 및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중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리분류의 원칙을 분석하고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검색분류에 관한 연구(김유리 2003b)에서는 중국의 시기별 검색분류표를 비교·분석하고 분류 사례를 소개하였다. 중국은 서양의 기록관리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독특한 변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국가기록물에 대한 표준화된 기능분류체계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며, 국가차원의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채미하(2004)는 일본의 근대 역사기록 분류에 관한 논문에서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의 분류

체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서구의 기록관리 원칙을 받아들였지만 근대 역사기록의 분류 실태를 볼 때,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반영한 분류체계 개발과 집합적 기술 등은 매우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유리와 채미하의 연구는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 간(2002. 9 - 2004. 8) 수행한 연구프로젝트(한국 근대사료의 기록학적 분석: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을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역사기록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한편 방일권(2003)은 1925년 설립된 러시아 국립역사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제정 러시아시기에 기록분류체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소비에트체제에 이르러 변화하는 기록관리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이아현(2002)의 연구는 종교단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실무적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이다. 이 논문은 "1년에 걸친 조계종 총무원 보존기록물 정리"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부터 기록물 분류·평가·기술의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서양에서 정립된 기록관리의 원칙을 한국의 민간기록관리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한 작업의 결과였다. 이 연구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기록철로 계층화하고 있으며, 대분류, 중분류까지는 조직별로, 소분류와 세분류는 업무기능별로 계층화하고

있다. 즉, 부(예: 총무부) 조직의 업무기능별로서 분류를 나누고, 단위업무별로 세분류를 구성하였다. 과거의 기록을 분류하기 위하여 현재의 조직과 업무기능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생산조직(부서)을 밝혀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직과 업무가 혼합된 분류체계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조(처리과+단위업무를 기준으로 분류)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생산된 기록에 현재의 조직의 구조와 업무에 따른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출처 및 원질서 존중의 원칙에 다소 위배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원질서를 찾기 어렵거나 복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명혁(2003)의 연구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기록물을 사례로 기록물 계층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쉘렌버그의 집합적 기록물군(collective archival group) 개념을 적용하여, 다수의 기록물군을 부문운동별(노동, 농민, 학생, 여성 등)로 묶을 수 있는 관리그룹(management records group)을 제안하였다. 즉, 기록의 기본 계층을 사료군(group), 사료계열(series), 사료철(file), 사료건(item)으로 나누고 최상위에 관리그룹(management records group)을 얹는 체계이다. 그러나 계층적 분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관리그룹이 논리적 분류를 위한 계층이라면 하나의 계층 대신 속성값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유연한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가령, 어떤 단체가

속한 부문운동을 하나로 특정하지 못할 경우(예를 들어 여성노동운동), 단일의 관리그룹으로 묶기보다는 속성값으로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보존기록 정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는 윤주범(2004)의 연구가 있다. 윤주범은 국가기록원의 사서로서 국가기록원이 기능분류나 원질서 존중, 다계층 기술의 원칙을 정리·기술 업무에 반영하지 않고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한 후 서가에 배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보존기록의 계층 체계의 정립을 거론하고 있지만 ISAD(G)를 적용한 계층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계층의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지만 이는 당시 기록관리계의 전반적인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06년까지 보존기록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이 분야의 논문들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겠다.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어 광건홍(2010)과 설문원(2011)의 논문이 나왔다. 광건홍(2010)의 연구는 보존기록분류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존속하면서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의 노동법령 준수를 관리하던 역할을 맡았던 노동청의 기록을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남아있는 기록이 당시 노동청의 활동상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하고, 편철 상태도 무질서하

며 기록철명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기록을 분류하고 재정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노동청 기록에 적용하였다. 그 방안은 ① 노동청의 기능을 4계층으로 분해하여 기능분류체계 개발, ② 기능분류표와 잔존 기록을 연계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록철들을 묶고 이를 대상으로 개요 목록 작성, ③ 질서 없이 편철된 기록의 분해와 선후행 관계를 반영한 논리적 재편철과 기록철명 재부여 등이다. 이는 물리적인 질서는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검색할 때 논리적 체계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같은 재조직 방식은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기록의 수집·평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고 수집할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기록의 적극적인 수집을 위해 노동사 맵의 작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단일의 소장기관을 넘어 광범위한 기록조사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가령 노동기록의 경우 국가기록원은 물론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 등을 조사하고, 이와 함께 노동사의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맵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의 정리 상태가 생산의 ‘원질서’를 보여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사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소장기록을 재분류해야 하고 더 나아가 체계적인 분류체계 개발을 토대로 적극적인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당시의 기능을 토대로 분류체계의 복원을 시

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설문원(2011)은 예술분야 보존기록의 정리와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예술 아카이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예술 아카이브에서 출처 및 원질서의 원칙에 기반한 정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연구이다. 개별 정보 단위로 파편적으로 관리되는 국내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예술아카이브의 정리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예술아카이브는 생산 및 축적의 맥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소장기록을 조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출처’와 원질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들이 전자적 관리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록관리 원칙의 준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3 근대 역사기록의 분류

조선총독부 문서 분류에 대해서는 박성진(2002), 설문원(2003), 배성준(2004), 이승일(2006)의 연구가 있다. 설문원(2003), 배성준(2004)의 연구는 앞서 밝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통해 수행되었고, 이승일(2006)의 논문 역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평가와 관련된 과제의 일환으로 집필되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국내 기록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기록학계가 조선총독부 기록에 관한 연구를 중요하게 다룬 것은 “한국 기록학사 연구에서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며, 식민지 기록문화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박성진 2002, 180). 또한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근대사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원”(설문원 2003) 중 하나이다. 특히 분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을 보면, 조선총독부 공문서가 국가 기록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원래의 생산 질서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조직 혹은 기능 분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조선시대의 經·史·子·集 분류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이승일 2006),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 발견, 구입, 진열, 기부, 고적 조사, 국유림, 지정, 도면, 지도, 신문보도, 기타 등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김도형 2001, 126).

이승일(2006)이 정리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에 관한 연구는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조선총독부가 공문서들을 어떻게 분류하였고 그 분류가 일본 본국의 공문서 분류체계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고(박성진 2002; 배성준 2003; 이승일 2006), 둘째, 현대기록학 방법론에 의거하여 남아있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분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설문원 2003; 배성준 2003; 이승일 2006)이었다.

박성진(2002)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문서 분류체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먼저 당시 일본문서관리규정

이 조선총독부의 문서관리규정 속에 차용되는 내용, 조선총독부가 지방행정기관의 문서관리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포한 규정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개각과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와 지방행정기관의 문서관리제도의 지배-피지배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1932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문서관리 이론서를 통해 당시 일본의 보존문서 분류법의 핵심을 검토하고 일본 내각의 일부 성(省)과 지방관서의 보존문서 분류 사례를 검토하여 당시 일본의 분류체계가 기능별 순차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이러한 체계가 조선총독부 문서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선총독부와 지방행정기관에서 생산·유통이 완료된 공문서의 분류 사례를 분석하여 조선총독부의 보존문서 분류방식을 재구성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문서분류체계 전모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식민지 본국의 문서관리 지배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총독부의 보존문서 분류 방식을 밝히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문원(2003)의 연구는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조선총독부 문서들을 하나의 분류체계로 편제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원칙과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록물 분류의 개념과 역할, 분류 원칙, ‘기능적 출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기능적 분류체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에 왜 기능분류가 적합한지를 논증하고 일부 기능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론적 연구와 조선총독부 조직 및 기능 분석 결과

를 토대로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 원칙을 제안하고, 분류표와 함께 시소러스를 연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배성준(2004)의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는 박성진(2002)의 성과를 진전시켰다. 배성준의 연구목적은 보다 구체적이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원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공문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조직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원질서’를 찾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조직, 기능,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문서조사를 통해 ‘류-목-절’ 분류가 이루어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류-목-절’ 분류체계가 부·국 단위의 조직, 부·국 단위의 업무, 과 단위의 업무라는 계층적 질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분류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의 원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본 메이지기의 분류체계, 대만총독부의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선총독부 분류방식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설문원과 배성준의 연구 결과는 이후 발간된 조선총독부 공문서 목록집(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2005a/2005b)의 분류체계에 반영되었다.

이승일(2006) 역시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소장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으나 기록물의 분류는 소장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기록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의 특성에 맞게 분류되어야” 하며, “조선총독부 공문서에 적합한 표준적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

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과 법무국의 업무분장표에 기초하여 대-중-소-시리즈-기록철의 순으로 분류표를 작성하였고, 남아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철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법무문서군을 위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법무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업무 분석에 근거하여, 법무 문서국의 문서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발표된 심세현(2012)의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개인이 수집한 지방 공문서에 대한 분류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말 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의 증손 최병하가 충남 청양군 목면 장구동의 구장으로 있으면서 수령한 문서들이다. 여기서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06)이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위해 개발한 기능별 분류체계를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기록관리 원칙이나 실효성 면에서 볼 때 적절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최병하가 구장 시절 형성한 분류체계가 원질서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질서가 남아있지 않아 재구성이 어렵다면, 차선은 ‘생산 출처’라는 기준(청양군 농회, 목면주재소, 청양경찰서 등 문서의 발급기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지방관서의 문서에 총독부 기능분류를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계층적 기술을 하는 것은 출처와 원질서 존중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박성준은 대한제국기의 공문서 분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2008년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체계의 특징을 조사하고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이후의 문서분류체계와 비

교하였다(박성준 2008a). 조선총독부는 部를 단위로 재분류하였지만,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체계는 部단위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재편집한 기록을 “대한제국기의 분류 체계에 따라 局課를 단위로 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 업무에 따라 기능별로 재분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역둔토 문서에 대한 사례 연구도 이루어졌다(박성준 2008b). 대한제국기 경리원(내장원)에서 부여한 역둔토 문서 분류를 조사하고, 조선총독부로 이관되면서 분류체계가 변형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2009년 연구에서는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가 조선총독부로 인계되어 재분류된 흔적을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철 표지에 찍힌 분류도장과 참고번호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박성준 2009). 또한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식민 통치에 필요한 문서로 평가하면서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보관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1895년 4월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 왕실의 보물 및 세전장원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 내장원 문서의 분류 체계를 연구했다(박성준 2011).

지금까지 이루어진 근대 역사기록의 분류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출처와 원질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당시 기능과 업무 분석을 통해 출처와 원질서를 반영한 분류체계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원질서의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산한 조직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원질서가 남아있지 않으며, 원질서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식적 문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층적 분류

체계 개발이 가장 좋은 해법인지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현용기록의 분류

현용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연구는 ISO 15489와 DIRKS 등의 국제적 기준이 국내 기록학계에 확산되기 전·후로 구분된다. 우선 2002년에는 방효순(2002b)과 조영삼(2002)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방효순(2002b)은 기록의 계층으로서 단위업무 계층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룬 논문에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의 개념과 역할, 보존 기록물 단계에서 기록물 시리즈 구성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기록관리에서 기록물건이 아니라 기록물 집합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평가, 이관, 각종 통제 등)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도구가 기록물분류기준표이다. 생산조직(처리과)별로 기록을 구분하고, 각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별로 기록을 모으는 방법이 도입된 것이다. 여기서 단위업무를 “처리과에 부여된 과 단위 기능을 다시 세분한 업무단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정부기록보존소 2002), 이 방식은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조직분류체계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방효순은 기록의 연속적 관리체제에서 단위업무는 기록물시리즈의 단위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업무를 처리과 하위의 업무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능분류에 따라 도출되는 논리적 단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각급 공공기관이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시기에 작성된 논문으로서 단위업무에 대한 개념과 역할을 학술적으로 해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영삼(2002)의 논문은 당시 공공기록관리 현상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발표되었다. 무질서하게 편철된 과거의 기록을 새로운 분류체계로 어떻게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편철이 이루어진 기록물 중에서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간을 부여 받은 기록물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분류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는데, 재분류 대상이 되는 기록은 이른바 '구기록물'로 통칭되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의 법규였던 사무관리규정에서는 문서의 각 건마다 보존기간을 정하고,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문서철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같은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이라 할지라도 보존기간이 다르면 따로 편철되는 구조였다. 이는 기록물의 업무활동에 따른 유기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류방식이며, 따라서 재편철은 원래의 업무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편철을 넘어 단위업무 등과 같은 상위 부류(class)로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기록물철을 단위사안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으나 과거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을 현재의 업무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에 따른 원질서 재해석 등 기록학적 질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최정태, 이주연(2003)은 조선조 이후부터 정부공문서분류까지 정부문서분류의 변천사를 보

여주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조 이후 구한말을 걸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공문서분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나타난 분류 체계의 문제점과 검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다. 과거 문서의 '분류'는 규정이나 규칙 정도에 따라 수행되어온 업무였으나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기록물의 분류' 항목이 시행령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분류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나타난 분류 관련 내용은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가령, '보존분류', '분류기준표'와 같은 용어가 모호하며, 보존분류의 기준이 왜 기능분류번호와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처리과 기관코드+단위업무코드+기록물처리 등록연번'으로 구성되는 기록물 분류번호는 '분류'번호라기보다 '처리'를 위한 도구이며, 따라서 분류기준표도 '처리기준표'로 이름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또 다른 공문서분류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맺고 있다.

이 논문은 기록 '분류'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 하는지에 대한 당시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왜 새로운 분류기준표가 조직분류와 업무분류가 결합된 체계를 채택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학계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의미를 갖는다. 한편 당시 기록관리계에 ISO 15489(2001년 제정)가 제시한 업무 기반의 기록분류 원칙이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국내 기록관리계에 ISO 15489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3년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

원은 2003년 ISO 15489를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3 참조), 여기서 ISO 15489의 분류원칙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 방법론 등이 소개되었다. 이후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이러한 국제표준과 분류체계 개발론 등을 분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마원준(2004)의 연구는 국제적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분류체계 개발을 시도한 사례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회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기반의 분류표와 처분일정표를 어떻게 개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정부기록물 분류체계에서는 조직(처리과)을 중요한 분류요소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기능분류체계로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연구는 기능분류의 원칙을 조직 기록에 적용한 선구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호주의 DIRKS 매뉴얼과 ICA/IRMT(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지침들을 준용하여 설문, 면담, 현장조사 등을 이용한 맥락조사, 업무분석, 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분류표와 처리일정표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적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연구였다.

이영숙(2005)은 시민단체 기록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환경운동연합을 사례로 기록 분류체계 및 처리일정표 개발 과정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조사, 인터뷰, 업무분석,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였으며, 호주 표준인 AS 5090과 DIRKS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능분류에 주제 분류를 결합한 형태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업무분석 표준

인 AS 5090과 DIRKS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능분류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시민단체 활동의 특성 상 기능 분류 대신 사업별 분류가 적합한 영역에서는 사업을 주제별로 구분한 후 사업별로 기록을 분류하는 복합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최관식(2006)은 기능분류의 원칙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분류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를 통합한 기록분류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록관리 업무분석 표준인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와 AS 5090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공학과 경영학에서의 업무분석 방법론을 보완하여 위원회 업무 및 기록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상세한 업무분류와 기록조사를 기반으로 대기능-중기능-단위업무의 계층체계를 개발하고, 각 업무별로 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기록은 인명별로 편철된다는 점이다. 즉, 인명별 기록철안에 여러 단위업무들로부터 생산된 기록들이 포함되는 분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업무분석과 업무별로 만들어져야 할 기록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은 기능에 입각한 분류체계에 따라 모아지지 않으며, 인명별 ‘케이스파일’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연구는 ‘기능분류’라는 당위적 원칙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 학계의 한계를 드러낸 경우이지만,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학적인 질문을 남겼다. ‘기록분류’와 ‘업무 분석’

의 목적이 무엇이며, 기록분류체계와 업무분류체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기록의 집합체와 업무체계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생각하게 한 연구였다.

한편 2005년에는 공공기록관리혁신이 추진되면서 전자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였다. 또한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문서관리카드와 과제관리카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도입되면서 이른바 이들 '카드'가 '메타데이터'인지 '기록' 자체인지, 기록관리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 표준 분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설문원(2005)은 다중 엔티티 구조의 메타데이터 표준인 ISO 23081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메타데이터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다중 엔티티와 엔티티별 계층구조를 제안하기 위한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였으나 실증적 분석에 입각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어진 설문원, 천권주(2005)의 연구는 전자기록의 분류를 다루고 있다. 전자기록의 분류 계층의 특징과 유형을 조사하고, 전자기록의 여러 분류 계층 중에서 특히 기록철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기능요건"에서의 전자기록 계층 모형과 기록철 관리방안을 집중 분석하고, 이 표준에서 제시한 전자기록의 계층 구조를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기록 계층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록분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철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 특히 전자기록철의 개시와 종결 기준 설정,

전자기록권(part)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기록분류와 관련된 부분적 문제만을 다루었고 외국 표준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상의 한계도 있으나 전자기록의 분류체계는 아닐로그 기록과는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공기록물 분류체계 상 핵심 계층인 단위업무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김정남(2006)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적용하는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분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나타난 단위업무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이들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59개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단위업무를 보존기간별, 유형별, 도서관 규모별, 업무기능별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단위업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실시와 기록조사에 입각한 기록물철명, 기능명 등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분류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능계층인 단위업무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기능분류는 어디까지나 해당 조직의 업무에 토대를 둔 분류체계이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에도 문화적, 업무 규모 상의 차이가 있는데, 분류체계(단위업무) 표준화가 가능하며 또한 타당하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유사공통기능에 대

한 관리가 사실상 사라지고 모두 고유 업무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유사공통기능의 표준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유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소러스의 개발이 합리적인 개선책일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주연(2006)의 연구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지만 현용기록의 분류와 관련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와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단위과제를 매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단위업무와 다(多):다(多)로 매핑된 단위과제가 전체의 51%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통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 연구는 역설적으로 매핑 혹은 통합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사례조사에 근거하여 당시 BRM 분류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조직의 BRM과 기록분류체계 관리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으로 볼 때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BRM에 입각한 공공기관의 기록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한 사례로는 김성희(2007)의 연구가 있으나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공공기관이지만 행정부처의 일반적인 공문서와는 다른 유형의 기록물을 위한 분류연구도 등장하였다. 이현정(2010)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사안파일을 위한 분류체계 모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검찰청의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건기록이 유럽연합의

Moreq 2가 제시한 사안파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형사사건기록의 경우 사건 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사건 단위 아래 다시 업무절차별 분류체계로 전개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는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절차별로 생산되는 기록 유형을 조사하고, 이러한 기록이 해당 절차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록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분류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관식(2006)과 이현정은 모두 케이스 파일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기능분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박용부, 김태수(2011)의 연구는 종합건설기업의 기록분류체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건설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분류체계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기업 3개 회사, 중소기업 4개 회사 등 7개의 종합건설기업의 기록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토대로 건설기록 분류체계 모형을 본사 조직 모형, 프로젝트 조직 모형, 통합형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 모형별로 표준적인 기능 분류 항목을 제안하였다. 또한 6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미 분류체계가 개발되어 있는 기업들에서는 '유용하나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직 분류체계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유용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이른바 유사 공통업무 분류표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사 기능을 수

행하는 조직이라 할지라도 기록분류체계는 해당 조직의 업무 절차상의 특수성과 기록의 특징을 반영해야 하고, 특히 건설프로젝트 기록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가 수행하는 공통의 기능을 근거로 개발한 모형은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유재욱(2005)과 장지숙, 이해영(2009)은 정보관리적 접근법을 적용한 기록분류 연구로 볼 수 있다. 즉, 유재욱의 연구는 현용문서 관리를 위한 파일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서를 분류하는 이유로 “같은 내용(주제)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한 곳에 모아주고 배열함으로써 검색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문서파일링시스템을 명칭(인명, 단체명 등), 지명, 주제 파일링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논하고 있으며, 특히 주제 파일링시스템의 다양한 배열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 있는 파일링시스템은 업무기록을 위한 일반적인 분류체계로 보기는 어렵고 업무참조용 기록(reference file)에 유용한 체계로 볼 수 있다.

장지숙, 이해영(2009)은 기록분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의 생산 맥락에 대한 정보, 즉 공공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과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 시소러스, 분류체계 속의 맥락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을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업무의 절차를 반영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록을 분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록분류

의 목적 중 하나가 관련 업무를 연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즉, 기록의 이관, 폐기, 접근 등 관리를 위한 집합 단위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분류가 아니라 기록집합체 간의 논리적, 기능적 연계를 드러내고, 특히 정부기관 간에 관련 있는 단위업무들을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다원적 분류체계를 개발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한 분류 결과의 타당성과 그 효과는 더 검증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연구 과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급변하는 기록관리 정책 환경 속에서 외국의 기록관리 이론과 표준을 학습하고 이를 기록관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고민들이 담긴 논문들이 많았다. 따라서 몇 편의 분석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현장 대응적인 연구가 많았고, 연구방법 측면에서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솔직히 기록분류론이라는 세부 분야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 간의 연구들은 기록관리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나아가 기록학 연구의 주요 영역으로서 분류론이 도전할 연구과제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기록관리 현장을 이론이나 방법론이 뒤쫓아야 하는 현실에서 연구는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록관리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연구 동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류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 국내 연구가 던져주는 문제점과 과제,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4.1 보존기록의 분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존기록 분류와 관련된 질문들을 먼저 정리해 보았다.

첫째, 보존기록 정리에 있어서 출처와 원질서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또한 이미 원질서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질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복원해야 하는가? 우선 출처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출처를 기능으로 보아야 할지, 여전히 조직을 중요한 출처로 보아야 할지는 애매하다. 기능 출처를 주장해도 실제 내용을 보면 조직과 주제가 결합된 형태인 경우가 많았다. 출처를 단순하게 기능으로 치환할 수 없다면 출처 존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증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질서 원칙의 준용이 어떠한지 여부도 해결할 과제이다. 국내 연구를 보면, 보존기록을 위한 정리체계(분류체계)를 설계할 때 원질서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록 생산 당시 그 조직의 구조와 업무를 분석하는 작업으로부터 복원하는 것이었다(예: 조선총독부, 노동청 기록물군). 그러나 정부기관처럼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조직과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현용기록과 보존기록을 동일한 조직에서 연계해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예: 조계중총무원)에는 현재의 조직과 업무 분석을 토대

로 과거 기록을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선택을 하였다. 현실에서는 생산당시의 업무 체계와 당시 기록의 질서를 완벽하게 복원하기가 대체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와 같이 수집자의 질서를 복원하는 대신 생산자별로 컬렉션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원질서는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 더욱이 해외에서는 원질서 원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Hurley(2004)는 개인의 편지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의 편지는 받는 사람이 보관하게 되고 기록의 세계에서 그것은 받는 사람의 기록물풍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전기 작가와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편지는 저자의 문학적 작품의 일부이다. 아키비스트는 사서나 골동품 전문가가 모은 “자필 편지 컬렉션”이 기록물풍의 무결성을 훼손한다고 불평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저자 또한 맥락의 일부이고 작가의 작품을 함께 모으려는 요구는 타당하다(Hurley ca. 2004, sec. 7: Yeo 2012, 105에서 재인용).”

따라서 Yeo(2010, 104-107)는 원질서의 보존보다는 ‘관계’에 더 관심을 두고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원질서 원칙의 새로운 해석이거나 혹은 원질서 원칙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존기록의 분류가 지향하는 기록집합체의 수직적 계층화가 과연 전자 환경에서도 필수적인가? 보존기록의 분류는 출처의 원칙에

따라 기록집합체를 구분하고, 원질서에 따라 집합체 내에서의 계층적 질서를 잡는 과정이다. 이는 계층적 기술을 위한 선행 작업에 해당한다. 호주 국립기록물관리기관의 기술시스템에 서처럼 시리즈 계층 이하까지만 기술하는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의 기술(description)은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접근법보다는 관계적이고 조합적인(granular)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Yeo 2010, 105).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집합적 기술의 원칙이지만 하이퍼링크 환경에서는 집합적 기술을 통해서만 숲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록의 집합 혹은 정리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데이터 구축과 운용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존기록 분류의 표준화는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일까?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표준적인 검색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역사기록의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중국의 검색분류체계가 국내에 소개될 당시 “이상적이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며” 출처 및 원질서에 의한 기록의 실체분류의 적용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 기록관리계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조선총독부 공문서 등 기록의 생산이 마감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소장기관을 넘어서는 표준 분류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Dryden(2005) 역시 보존기록의 분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화된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정부기관들이 사용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도 단일 기관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분류를 지향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처리과 단위과제’라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통합적 검색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기록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소장기관’의 틀 속에서 형성되는 ‘배열 체계(arrangement system)’를 넘어서는 범국가적 분류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물론 형식은 분류체계가 아니라 기능 시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의도적 수집물의 분류에 대한 이론화가 필요하다. 출처주의나 원질서의 원칙은 결국 조직 기록물을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이론 체계이다. ISAD(G)의 다계층 기술의 제1원칙인 ‘하향식 기술(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가면서 기술)’은 현장에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조직하는 데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결국 ISAD(G)의 제1원칙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재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 현용기록의 분류

국제표준인 ISO 15489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2003년 기록물분류기준표가 도입되었고, 2007년 이후에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체의 기록분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분류체계의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위한 실

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제적 기준을 준용한 현용기록분류체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의 기능분류체계는 외국의 기능기반 기록 분류체계와는 사뭇 다른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을 토대로 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해외에서도 기능 기반 분류체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국가기록관리기관(The National Archives)의 Todd Malcolm은 “기능기반 분류체계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엄격한 기능적 접근은 케이스 파일(case file)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자에 대한 경험적(empirical)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Malcolm 2003, 3). Stuart Orr(2005)는 기록을 분류하는 데에 기능적 접근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Orr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학술전문가와 실무자 모두 기능 기반 분류가 가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듯 보이지만, 기능분류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록관리자는 기능적 접근법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밝혔다. Orr는 기능분류체계가 이용가능성(usability)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학술연구자가 실무자보다 기능분류의 편익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기능분류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인식 격차를 밝힌 것이다.

Garrido(2008)은 기록관리자가 수행하는 전자문서 분류법이 과연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European Central Bank의 이용자 조

사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 사례연구에서는 기록관리자의 관점과 이용자의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Foscarini(2009) 역시 European Central Bank를 대상으로 기능분류 원칙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녀는 기능적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루어진 분류체계라도 그러한 분류체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최종이용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기능분류체계에 대한 최종이용자의 이해가 더 필요하고, 이용자들을 위해 분류체계는 단일 기관을 넘어 여러 기관의 기능을 넘나드는 정보공유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의 제약은 기능분류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론이 부족한 때문이며 특히 기능분류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유하고, 기존의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Inge Alberts 등(2010)은 기능기반 분류는 조직이 기록관리 요건을 준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록관리자가 그러한 분류를 일관성 있게 만들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또한 자신의 문서를 일상적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분류체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실패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프로세스, 기능, 행위 등의 기본 개념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을 통해 기록관리에 대한 조직의 관점이 최종이용자의 관점과 조화를 이루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이용 가능한 분류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해외 연구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분류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 기능분류의 원칙과 기록관리상의 편익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이용자(기록생산자) 관점에서 기능분류체계의 개발과 운용에 대한 연구들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기능분류체계가 순수한 기능에 기반하여 개발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기능의 각 계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공유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기능분류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에 의한 기록분류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제기²⁾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과 이론 분석이 결합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록분류는 기록의 평가, 공개관리, 접근통제는 물론 기록물명의 부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ISO 15489는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서 기록분류가 이러한 기록관리 업무 지원에 얼마나 유용한지, 어떻게 운용해야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분류계층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 단위업무, 단위과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증에 입각한 분석적 탐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 기록학 이론에 의하면, 보존기록의 분류 기준은 '출처'와 '파일링 구조'로 나뉜다. 분류체계 개발에 있어서 출처는 기록의 생산맥락, 즉 조직이

나 기능 분석에 따라 하향식으로 적용되고, 파일링 구조는 업무의 흐름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을 묶어가는 상향식 체계였다(Miller 1990; 설문원 2005에서 재인용).

또한 현용기록과 관련된 표준인 Moreq 2010은 '집합(aggregation)'과 분류를 구분하고 있다. "기록에 대해 업무 맥락을 제공하고, 기록과 기록을 생산한 업무과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합은 "업무 맥락뿐 아니라 기관의 필요나 기타 기준에 따라 구성되는" 기록의 집합체이며 여기에도 계층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기록물철 이하는 기록집합체로, 그 이상의 계층은 분류표로 설계하여 기록집합체가 복수의 분류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보존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상위계층에 대한 집합적 기술의 유지가 쉽지 않으므로 기록물철까지만 '집합'의 개념으로 묶고, 단위과제 이상의 계층에서는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하나의 집합이 여러 단위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분류의 편익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분류체계가 필요한 부분과 그밖에 연계, 속성 부여 등 다양한 구분 방식이 효과적인 경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분류모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독특한 전자 환경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분류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데이터세트, 웹 기록, SNS 기록 등 생산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는 유형의 기록을 분류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

2) 중앙행정부처 기록연구사 5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실시한 초점집단면담(2012.11.16).

올러 반복적 기능, 창의적 기능 등 기능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록분류 모형을 탐구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가능한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전자 환경에서는 도전할 만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출처와 원질서의 원칙에 따른 보존기록의 분류가 전자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 기능 기반의 현용 기록 분류와는 어떤 개념적 연계를 갖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관리체계에서는 현용 기록을 위한 기능분류체계와 보존기록의 분류 체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록학적 관점에 합당한 방법론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짧은 기간동안 우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큰 발전을 이뤄냈으며 교육 및 연구 영역에서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미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채 도입된 많은 제도와 시스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기능분류가 오히려 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부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보존분류체계는 이용자(기록생산자나 최종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기보다는 아직도 국제 기준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며, 검색도구에서도 명확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록학계는 얼마나 현실 문

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전망으로 이끌 수 있을까. 특히 급변하는 전자적 업무 환경에 직면하여 이론은 현장을 안내하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까. 현대 기록학의 원칙과 이론이 해법에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가.

기록분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실무적 목적의 사례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이제 우리의 연구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에 밀착하되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분류 결과물의 이용자는 기록생산자이거나 기록의 최종이용자로서 일반국민, 학생, 교사, 학자 등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실무적 목적에만 매몰된 연구는 역설적으로 실무에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 이룩이 필요하다. 기록관리의 원칙과 이론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전자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현장의 문제를 해석하고 방안을 제시하며, 다시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른바 저공비행이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문제를 거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학문의 정체성은 해당 학계가 인정하는 전문용어군의 존재와 관련된다. 2종의 용어사전(기록학 용어사전, 기록관리학사전)이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번역어의 난립은 여전하다. 한편 복합적 학문으로서 기록학은 학문적 정체성만큼 다른 학문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학문적 소통의 기반은 명확한 개념과 용어에 있다는 점에서도 용어 정비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0. 노동청 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141-178.
- 구자영. 1981. 정무간행물 정리에 있어서의 보존 문서 분류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학회지』, 8: 209-232.
- 김도형. 2001. 일제하 총독부 박물관 문서와 관리체계. 『기록학연구』, 3: 115-138.
- 김성희. 2007. 공공기관 업무 기반 기록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세미나 자료집』, 153-163.
- 김유리. 2003a. 중국의 기록물 정리분류의 원칙과 사례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297-316.
- 김유리. 2003b. 중국의 기록물 검색분류: 『중국당안분류법』(1997)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3): 121-137.
- 김익한. 1998. 기록물 관리체계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11: 61-75.
- 김정남. 2006.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43-63.
- 김정하. 2009.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1: 3-40.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14: 359-388.
- 마원준. 2004. 한국 개(個)교회기록물의 기능분류 방안. 『기록학연구』, 10: 145-197.
- 박성준. 2008b. 경리원의 역둔토 문서 분류와 분류 체계의 변형. 『규장각』, 32: 213-256.
- 박성준. 2008a. 대한제국기 公文書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 41: 317-354.
- 박성준. 2009. 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 분류도장·창고번호도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2: 115-155.
- 박성준. 2011.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공문서 편철과 분류. 『기록학연구』, 28: 3-33.
- 박성진. 2002. 일제하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분류 방식. 『기록학연구』, 5: 179-208.
- 박용부, 김태수. 2011. 건설기록물 분류체계 모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83-101.
- 방일권. 2003.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러시아국립역사기록보존소(RGI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7: 75-106.
- 방효순. 2002a.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69-92.
- 방효순. 2002b.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능적 단위로서의 단위업무 역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4: 367-392.
- 배성준. 2004. 조선총독부 공문서 분류체계의 복원. 『기록학연구』, 9: 41-73.
- 설문원. 2003.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위한 기능분류체계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457-488.
- 설문원. 2005.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기록의 계층 구조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한

- 국비블리아학회 · 한국문헌정보학회 2005년도 3개 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자료집], 15-39.
- 설문원, 천권주. 2005. 전자기록철의 구조와 관리방안 : 영국 ERMS 표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49-72.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217-247.
- 심세현. 2012. 모덕사 소장 일제강점기 공문서의 기록학적 가치와 정리 · 기술 방안. 『충청문화연구(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8: 83-137.
- 유재욱. 2005. 문서기록물의 파일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5-24.
- 윤주범. 2004.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 · 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118-162.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 이승순. 2006.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 『기록학연구』, 14: 53-89.
- 이승일. 2006.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서지학연구』, 35: 113-143.
- 이승휘. 2001. 중국의 혁명역사기록물의 목록기술과 검색분류(1). 『기록학연구』, 4: 131-144.
- 이승휘. 2002. 중국의 혁명역사기록물의 목록기술과 검색분류(2). 『기록학연구』, 5: 209-229.
- 이아현. 2002. 조계종 총무원 보존기록물 정리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기록학연구』, 6: 121-160.
-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 이원영. 2000. 기록물분류의 원리 : 문헌분류와의 비교. 『기록학연구』, 2: 103-128.
- 이주연. 2006. 정부기능연계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분류체계와 기록분류체계의 통합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43-60.
-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 장지숙, 이해영. 2009. 맥락정보를 이용한 기록 자동분류시스템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151-173.
- 전명혁. 2003. 매뉴스크립(Manuscripts)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 13: 189-204.
- 정부기록보존소. 2002. 기록물분류기준표 3차 조사서 작성지침. 방효순(2002b)에서 재인용.
- 조영삼. 2002. '구기록물' 재편철 방안의 모색. 『기록학연구』, 5: 87-110.
- 채미하. 2004. 근대 일본 역사기록물 분류론의 동향과 실제. 『기록학연구』, 9: 74-109.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 최관식. 2006.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7-85.
- 최정태, 이주연. 2003. 문서분류의 이론과 변천에

- 관한 연구- 조선조이후 현행 '정부공문서 분류'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2): 1-33.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3. 『기록관리를 위한 ISO 표준해설』(교육자료).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2005a. 『조선총독부 공문서종합목록집』.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엮음. 2005b. 『조선총독부 공문서 다계층 상세목록집 : 학무국 사회 교육 문서군 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편. 2012. 『기록물관리(분류) 기준표 정비 워크숍 자료집』(한국기록전문가협회 주최, 2012. 11. 12. 대전 정부종합청사).
- 한국기록학회 편.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기술표준원. 2007. KS X ISO 15489-1:2007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 일반사항.
- 한국기술표준원. 2007. KS X ISO/TR 15489-2: 2007 문헌정보-기록관리-제2부 : 지침.
- Alberts, Inge, Jen Schellinck, Craig Eby' Yves Marleau. 2010. Bringing together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Business Process Analysis: Growing Trends in Records Management. Gatineau(Québec): Cogniva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http://www.cais-acsi.ca/proceedings/2010/CAIS075_Albertsetal_Final.pdf>.
- DML Forum Foundation. 2010. Moreq 2010 (Modular Requirements for the Records System). <<http://moreq2010.eu/>>.
- Dryden, Jean. 2005. Standardizing archival arrangement? Are you seriou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3(1): 81-85.
- European Commission. 2008. Moreq 2(Model Requirements for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Specification). Brussels (March 2008). <<http://www.moreq2.eu>>.
- Foscarini, Fiorella. 2009. *Function-Based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An Exploratory Study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in Central Banks*.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Garrido, Beatriz Garcí a. 2008. Organising electronic documents: the user perspective - A case study at the European Central Bank. *Records Management Journal*, 18(3): 180-193.
- Hurley, C. ca. 2004. Relationships in Records.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relationships-in-records-rev-3b.rtf>>.
- Orr, Stuart A. 2005. Functions-Based Classification of Records: Is it Functional? Master's Thesis of Northumbria University. <http://public.archiefschool.net/C8/Publicaties%20door%20derden/Document%20Library/Orr_Functional%2

0Classification.pdf〉.

Todd, Malcolm. 2003. 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 Design. Kew: The National Archives.

Yeo, Geoffrey. 2010. Debate about description.

In :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Santa Barbara, Calif. : Libraries Unlimited.